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42
----------	-------

발의연월일 : 2022. 9. 29.

발 의 자 : 기동민 · 강선우 · 강준현
김영배 · 김원이 · 김희재
박용진 · 송갑석 · 인재근
정태호 · 한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스톱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스톱킹 처벌법을 제정했으나,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톱킹 살인사건으로 스톱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톱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여 접근근지,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스톱킹범죄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여 접근을 금지하고, 긴급응급조치 기간을 2개월로 연장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제3항 삭제).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분리 및 범죄수사”를 “분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상대방”을 각각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잠정조치”를 “잠정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

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u>분리 및 범죄수사</u>	2. ----- <u>분리</u>
<u><신설></u>	<u>2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u>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톱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톱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 ----- ----- ----- ----- ----- ----- ----- ----- -----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생 략)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 ④ (생 략)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생 략)

<신 설>

-----.

1.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2.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2개월-----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p>제21조(과태료) ① <u>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u>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생략)</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u>이 부과·징수한다.</p>	<p><u>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제21조(과태료) <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u>----- ----- ----- -----.</p>
---	--